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배경과 광주·전남 영향은

성장동력 기업 다 빼앗겨 지역 경제 고사

우주산업진흥원·특화단지 조성도 차질 불가피

지역 균형발전 포기 정책 … 비수도권 반발 클 듯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은 역대정권에서 추진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의 최소한 안전장치로 작동해온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대폭 손질해 수도권에 첨단 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산업 여건과 입지면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비해 절대우위에 있는 수도권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산업·기업의 수도권 과밀을 불러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 비수도권 지역 경제의 고사가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배경=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논리적 배경은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그동안 수도권의 과밀과 산업의 편중을 억제해온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대폭 개정해 사실상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의 대규모 공공시설 등의 부지나 낙후지역, 자연보존 권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별도의 개발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개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총량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과밀부담금이나 광역기반시설의 설치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광주시, 전남도는 지역의 핵심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광섬유, 항공기·우주선 부품 등 25개 첨단 업종 공장의 대폭 증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관련 기업 유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시 광산업의 경우 초기 인프라 구축작업을 마친 상황에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사실상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전남도의 '동북아 우주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우주항공산업과 R&D, 관광시설·레포츠 시설을 집적화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우주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입주가 허용될 경우 연관 기업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 때문에 전남으로 이전하는 업체가 사실상 전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산업진흥원, 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계획은 고흥만 간척지 및 고흥군 일원(268만6천㎡)에 오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7천70억을 들여 우주산업진흥원과 우주산업 특화단지, 우주항공 테마파크, 무인기 개발종합지원센터 등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관련 기업의 유치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에서 인구·산업 과밀을 더 심화시켜 수도권의 성장지체 현상을 부르는 한편, 지방 경제를 고사시키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채희종·윤영기기자 chae@kwangju.co.kr

박광태(오른쪽) 광주시장이 28일 서울 국민일보 빌딩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요청사업과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박주선, 조영택, 김영진, 강운태, 김동철, 이용섭 의원이 참석했다. 〈광주시 제공〉

"현안 예산·광역경제권 협조해 달라"

박광태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 및 '5+2 광역경제권 계획'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 문제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236억원), LED 조명도시 조성사업(270억원), 광주 R&D 특구 지정 및 육성(77억원),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지원(30억원) 사업 등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사업은 광주시의 요청보다 적은 2천57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는데 그쳤다며 추가적으로 1천1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은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영남권은 신규 사업이 반영된 반면 호남권은 계속사업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당분간 정부의 광역경제권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시장은 또, '광주시 등 호남권이 광역경제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호남을 제외하고 추진하겠다'는 균발위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망발이며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광역경제권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공조를 통해 광주시의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짓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강운태 의원 등은 이날 호남권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선도 사업도 당초 5개에서 8개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시당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광산 갑)은 "내일 총리를 만나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재검토를 적극 주장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발전특별법 등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균발특위 내일 본격 가동

'5+2 광역경제권' 의견 절충 관심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위원장 홍재형)가 30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 균형발전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대통령 산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1일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과 사안들을 집중 검토한다. 우선 균형발전특위는 주로 비(非) 수도권 의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아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 참여정부 하에서 시작돼온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역량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5+2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위 내에서 타지역 의원들과의 의견 절충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상당한 만큼 이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인 이용섭 의원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수도권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권경석(경남 창원), 김성조(경북 구미), 김정훈(부산 남구),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유승민(대구 동구), 유재중(부산 수영), 이계진(강원 원주), 임동규(비례대표), 최구식(경남 진주)

◇민주당 :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이용섭(광주 광산), 양승조(충남 천안), 최규성(전북 김제·완주), 홍재형(충북 청주 상당)

◇선진과 창조모임 : 박상돈(충남 천안)

◇비교섭단체 : 김노식(비례대표), 송훈석(강원 속초·고성·양양)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엑스포는 국책사업, 민자 적극 지원을"

여수 출신 국회의원 금융기관장에 요청

"경제가 어렵지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는 국가가 뒷받침하는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합니다"

민자유치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 출신 국회의원인 김충조·김성곤·주승용·서종표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여수박람회 지원 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상훈 신안은행장, 송기진 광주은행장,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중앙회·외환은행·토마토저축은행·동양종금 등 금융기관 임원 등이 초청됐으며 강봉균 국회 여수엑스포지원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 오현섭 여수시장, 김병일 여수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충조 의원은 이날 "여수박람회는 여수와 우리나라의 도약의 기반, 신성장 동력의 바탕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여기 간담회 참석자들이 힘을 모아 여수엑스포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균 위원장도 "여수 엑스포는 국가가 뒷받침하는 국책사업이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고 낭패 보는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지원하겠다"며 "상호 신뢰의 토대 위에 민자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수엑스포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여수개발, 신진양레저관광, 이엑스산업개발, 서보엔지니어링, 에프엠, DMK토건, 서희건설 등의 임직원이 참석,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